



「충남환경보전」 다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박 경 배
(朴景培)

충청남도
보건환경국장

학자들에 따라서 다소 그 시점에 차이는 있지만, 17세기와 18세기 영국 그리고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후 저지할 수 없는 흐름이 되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산업화와 함께 인구증가가 폭발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인류의 번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난 1970년 발표된 로마클럽보고서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그것은 마냥 인류의 장미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로마클럽보고서는 자원의 고갈, 대기의 오염, 건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의 성장이 오히려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제 환경문제의 심각성 그리고 그 해결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하다. 60년대 이후 선진 외국보다 훨씬 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와 환경을 조화시켜 나갈 여유를 갖지 못한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문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개선시책이 펼쳐지고 있다. 환경문제는 총체적으로는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파괴로 나타나지만 구체적으로는 몇 개 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질오염, 대기오염, 쓰레기

문제 등이 그것이다.

먼저 수질오염문제를 보기로 하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칭송을 듣던 우리나라, 계곡에 흐르는 물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중의 하나였던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대로 먹기는 커녕 밭을 담글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일테니 생략하기로 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른바 수질보전 기초시설의 확충이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이 바로 수질보전 기초시설이다. 천안에 하수처리장이 가동되고 나서 그 하류인 아산 곡교천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수질보전 기초시설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道의 경우 현재 하수처리장이 4개소로서 하수처리율은 19.7%에 불과하다. 2005년까지는 모두 31개소를 설치하여 하수처리율을 80%이상으로 끌어

올릴 계획으로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뇨처리장은 18개소로서 하루 1,206kl의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내 보내고 있다. 이것도 2002년까지는 10개소를 더 증설할 계획이다.

축산폐수처리장은 현재 겨우 2개소에 불과하다. 하천오염의 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폐수의 처리를 위한 공공기초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2001년까지는 15개소에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수질보전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은 첫째 재원문제이고, 둘째 “NIMBY”라 부르는 혐오시설 입지 기피현상이다.

재원문제에 대해서 얘기 하자면,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투자를 확대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사정이 여의치 못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1만불 소득시대를 맞아

선진국의 반열에 끼게 된 만큼 그에 걸맞는 환경분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분야 투자에 더 많은재원을 배분해야 하겠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눈에 보이는 사업에만 치중하여 환경분야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은 귀담아 들어야 할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는 주민복지를 위한 것이고, 환경부문은 주민복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은가?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일반주민이 해야할 일은 없을까?

우리나라 하천오염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하천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생활하수가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모든 생활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여 내 보낼 수 있다면 상관 없겠으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 했듯이 우리 道의 경우 2005년에나 가서는 80%이상의 하수처리율을 달성(이것도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다)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시화호가 이미 썩어 있고, 간월호·부남호도 썩어가고 있다. 생활하수가 그대로 유입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시화호 살리기, 간월호·부남호 살리기 주민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일본 최대의 호수라고 하는 비파호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그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시가현 주민들이 모범적으로 펼쳤던 합성세제 안쓰기 운동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것인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질보전사업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민운동이다. 행락철이면 산과 계곡에 쌓이는 쓰레기, 무단취사로 인한 수질오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행정의 힘만으로 수질개선을 할 수 없다.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앞으로 보다 활발한 주민운동을 기대해 본다.

다음은 대기오염문제를 살펴

보기로 하자.

다행스럽게도 충남은 대기오염문제가 아직은 우려할 단계가 아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가리켜 아직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이므로 좋아할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름철만 되면 오존주의보와 경보 등으로 바쁜 서울 등 대도시라든가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주민 집단이주까지 검토하고 있는 울산, 여천 등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 우리 충남은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도 이제 대기오염을 걱정해야 할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천안과 대산공업지역이 바로 그곳이다.

도에서는 이 지역에 대하여 대기오염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다. 이제 겨우 38만대에 불과한 충남도에서 벌써부터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市나 郡 단위에서, 국지적

으로는 바로 서울 등 대도시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한 상설기동반을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해서이다.

앞으로도 도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거울삼아 우리 도에서 만큼은 대기오염에 따른 공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

다음은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 문제의 해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 우선은 발생량을 적게하고 발생된 것 중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하고 태울 수 있는 것(단, 다이옥신 발생을 막는다는 전제가 따른다)은 태우고 그래도 남는 것은 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로는 쉬운데도 잘 풀리지 않고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듯이 “쓰레기 대란” 등이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원천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많다. 작년에 실시한 충

남환경보전종합대책 용역결과에 따르면 95년말 현재 기준으로 충남의 경우 1인당 평균 0.9kg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는 2배 이상 많은 양이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은 것, 가정에서의 재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등이 주된 원인이다.

둘째, 재활용체계가 미흡하다. 앞서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우리 道의 경우 재활용률이 21.7%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된 재활용 가능 쓰레기의 적지 않은 부분이 실제로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재활용율은 상당히 떨어진다. 우리 道에서는 2001년까지 생활 쓰레기 재활용률을 35%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최근 쓰레기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이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쓰레기 처리에 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쓰레기 처리기술의 개발·보급이 미흡하다. 음식쓰레기 발

효시설의 경우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 음식점 등에 설치토록 권장(금년 7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경우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하고 있지만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인지 확실하게 기술평가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본격 지방자치 실시이후 증폭된 애항심과 과거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합해져 이른바 “NIMBY”현상이 확산된 것도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는데에 큰 몫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앞서 제기한 원인에서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온다.

우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지난 95년 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는 이를 위한 시발점이었다. 종량제 실시 첫 해에 그 전년도 보다 쓰레기발생량이 20%이상 줄어든 것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요즘들어 쓰레기 발생량이 다시 늘고 있다.

道에서는 금년에 쓰레기줄이기운동을 역점적으로 펼쳐 종량

제 실시 첫 해의 열기(?)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완전한 평가는 이르지만 금년 상반기 실시 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6.1%가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라고 하는 것이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게 하는 제도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여나가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각 가정에서 이해하고 그 실천에 동참 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둘째,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도 있듯이 쓰레기 재활용체계 구축에 더 노력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는 재생 가능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고 그것을 수거하여 한 곳에 모으고 재활용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재활용체계이다.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마지막 단계인 재활용품 생산이다. 재활용품 생산에 드는 비용이 신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 경제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재활용

품 생산이 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파괴를 줄여 줄 수 있다는 효과까지를 감안한다면 사회적 타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양자의 겹을 메워 주는 것이 바로 행정이 해야 할 몫이다. 재활용품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재활용품 사용을 의무화 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는 재정부담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함께 수고스럽더라도 각 가정에서 분리 배출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주어야 한다.

셋째, 쓰레기 정책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재활용·소각·매립 이 3가지가 쓰레기처리방법인데 어느 것을 어느 정도나 시행할 것인지 뚜렷한 정책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무엇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리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합의 없이, 그리고 기술개발 없이 쓰레기 소각시설 확충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다가 다이옥신이라는 직격탄에 비틀거리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부문별로 살펴 보았다. 이외에도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 않지만 토양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문제 등도 곧 발 등의 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리 道에서는 “4천만이 살고 싶은 忠南”을 道政 캐치프레이즈로 하고 있다. 깨끗한 환경이야말로 이러한 忠南을 만들어 가는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道에서 의욕적으로 작년에 충남환경보전종합대책을 지역내의 관련분야 전문교수들에게 의뢰하여 수립한 것도 4천만이 살고 싶은 忠南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이라고 하겠다.

앞으로 道에서는 종합대책에 따라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쓰레기처리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면서 지역내 하천,

호소 등의 수질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고자 한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환경문제 해결에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된다. 산업혁명 이후 오염된 템즈강을 살려낸 것은 템즈강 유역의 주민운동이 그 시발이 되었다. 그리고 상류지역의 공장을 하류로 이전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힘을 합해 노력할 때만이 환경개선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빌려쓰고 있는 이 땅을 깨끗하게 가꾸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열린충남**